

입법정책정보

-제22호-



대전광역시의회

○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 목 차 ||

I. 상위법령 제·개정	1
1. 관광진흥법	1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7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11
1.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11
2. 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3
3.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16
4. 전라남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18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20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27

I 상위법령 제 ·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일부개정]

□ 제정 · 개정 이유

-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의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도 또는 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8. 6. 5., 2018. 6. 12., 2018. 12. 24., 2019. 12. 3., 2024. 10. 22.>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 2024. 10. 22.>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일 것

2.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③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8. 6. 12., 2022. 5. 3.>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에 위한 조사·분석)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 2024. 10. 22.> [본조신설 2019. 12. 3.] [제목개정 2022. 5. 3.]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조례 제6282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4.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사업

5.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5.8.14.>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내를 방문하는 단체대표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7.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 시장이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14.>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4. 그 밖에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 정산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8.14.>

제5조의2(범시민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전방문의 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방문의 해 3개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전방문의 해 사업을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3. 대전방문의 해 사업을 위한 관광서비스 개선 정비에 관한 주요 시책
4. 대전광역시의 관광 진흥 및 대전방문의 해 주요 관광 콘텐츠의 대외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관광 진흥 및 대전방문의 해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0.18.]

제5조의3(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9.30.,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관광업체 종사자
4.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19.10.18.]

제5조의4(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5조의6(위원회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5조의7(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5조의8(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5조의9(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8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의2(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및 활동비 지원)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 및 안내
2.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해설 활동에 대한 실비
2.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비

[본조신설 2016.4.12.]

제8조의3(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를 설립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 운영 경비
2. 관광 안내 서비스 개선 사업
3. 관광객 환대 개선을 위한 관광종사자 교육 사업
4.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5. 관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및 단체 지원 사업

③ 대전광역시 관광협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3.]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및 관광홍보관 관리·운영
2. 관광객 유치사업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4. 관광종사원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
5. 관광 기념품 또는 사진 등 공모전 개최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그 밖에 관광 여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15호, 2024. 10. 22.,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등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2.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3.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제29조의2(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이하 “저공해운행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상 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현황, 대기오염물질 노출 인구현황, 교통량 등 지역적·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었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저공해운행지역을 변경·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때에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위치, 지정일시, 지정·변경·해제 사유,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변경·해제 절차, 공보 고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0. 22.]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

[시행 2022. 12. 30.] [대전광역시조례 제5931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제6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2조 삭제<2022.12.30.>

제3조(저공해조치의 명령)

-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 안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정비 권고) 시장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저공해조치 전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5조(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전환대상자동차에 해당되는 저공해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중 통근·통학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제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분뇨정화조청소 등 청소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3.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제6조(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검사의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30.]

부칙 <조례 제3833호, 2010.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체명령을 받은 경우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전환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시행 2024. 10. 4.] [전라남도조례 제6106호, 2024. 10. 4., 제정]

☐ 제정이유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의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 및 시·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2. 전라남도경찰청 교통 담당 공무원
 3.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교통 담당 공무원
 4. 교통관련 전문기관에서 소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자동차 소음 관련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

-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및 시·군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 ① 도지사는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판매점, 수리점 등 이륜자동차 관련 영업점에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24.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 10. 24.] [전라남도조례 제6127호, 2024. 10. 24., 제정]

□ 제정이유

전라남도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전라남도 및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전남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국방중소·벤처기업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비전과 목표
2. 방위산업 현황과 시장전망
3. 방위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군 협력 방안
5. 방위산업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6.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방위산업 육성산업)

①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중소·벤처기업 육성
2. 방위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개척
4. 산·학·연·관·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5.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
2.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핵심기술·부품개발 등 연구개발
3.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 진출
4. 산·학·연·관·군 협력
5.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2. 국방중소·벤처기업 육성

3. 방위산업 육성 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24.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 10. 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818호, 2024. 10. 2., 제정]

□ 제정이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관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 ① 도지사는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의 추진방법
 3. 희귀질환 교육·홍보
 4. 그 밖에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희귀질환관리사업 추진)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 사업
3. 희귀질환 관련 상담, 교육, 연계 및 홍보 사업
4. 희귀질환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희귀질환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희귀질환 극복의 날 행사 등의 지원) 도지사는 법 제4조에서 정한 희귀질환 극복의 날(매년 2월 마지막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행사 및 학술세미나
2. 희귀질환 극복에 기여한 기업인 및 관련기관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공무원, 도민 등 발굴 및 시상
3.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희귀질환 극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희귀질환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대상자 발굴) 도지사는 도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희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중복지원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시행 2024. 10. 24.] [전라남도조례 제6118호, 2024. 10. 24., 제정]

□ 제정이유

종이의 생산 및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낭비, 환경오염, 탄소배출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이 사용 저감을 지원하여 전라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2. 전라남도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4. 「전라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3조(책무)

-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도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① 도지사는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세부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 ①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수량 이상은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협조) 도지사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 ① 도지사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24.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안건번호: 의견24-0321 / 요청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의뢰안건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100세가 된 주민에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주요내용

[질의요지]

가.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100세가 된 주민에게 100만원 이내의 장수 축하금을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부칙에 조례 시행 당시 100세가 넘은 주민 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는 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제1항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상 예산 편성 및 확정과 관련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에 권한을 분리·배분하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결산 승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 집행에 대해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추87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100세가 된 주민에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상위법령의 규정 내용, 조례 규정 간 체계 및 문언의 의미, 보조금 지급 근거규정의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2. 9. 22. 의견제시 22-0239 참조), 일반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은 “지원하여야 한다”와 같이 의무부과 형식으로 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권한부여 형식을 취하게 되는바, 이는 의무부과 형식으로 규정하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소요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강행규정 방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116쪽 참조).

이 사안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장수어르신 축하금 지급 조례안’(이하 “강원특별자치도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100세가 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장수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수축하금 신청과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도지사에게 장수축하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도지사에게 반드시 해당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정도의 견제 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6. 5. 의견제시 24-0117, 법제처 2021. 5. 18. 의견제시 21-0163, 법제처 2017. 9. 22. 의견제시 17-0233 참조).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는 장수축하금을 “한 차례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로 하여금 지급 횟수에 관한 재량의 여지 없이 대상자별로 1회만 지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바, 해당 규정에서 지급 횟

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장수축하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2. 29. 의견제시 24-0049 참조).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조례안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이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는 지급 근거규정의 형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문언상 이는 도지사에게 장수축하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고, 조례 시행 당시 100세 이상인 사람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조례안 부칙 제2조가 조례 시행 당시 10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해당 조례안의 시행으로 주민등록상 나이가 100세가 된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례 시행 당시 이미 100세가 넘은 사람에게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그러한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변경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주: 법제처 2021. 5. 18. 의견제시 21-0163 참조).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 11.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략)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2.

[안건번호: 의견24-0360 / 요청기관: 세종특별자치시]

□ 의뢰안건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관련)

□ 주요내용

[질의요지]

가.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

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을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참조).

한편,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 사무직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 사항 처리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각각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를 공공기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 소속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지침을 제정하도록 각 소관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규율 범위를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집행기관 소속 공직자에게도 적용되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10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13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4조) 등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규정(제26조)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공직자의 직무수행·복무 등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그에 관한 권한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보이는바,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집행기관 소속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소속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제1항에서는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 아목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및 교육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제24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각 소관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규율 범위를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제2장) 및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제3장) 등을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으로 규정하면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규정(제20조)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공직자의 직무수행·복무 등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그에 관한 권한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보이는데,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며,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각주: 2024. 9. 10.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2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4조제1항에서는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때 그 입법형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동강령을 제정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생략)
 -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이하 생략)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①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②·③ (생략)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 사. (생략)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및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 4. (생략)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 관련 18개 법률 제정

□ 주요내용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월 한 달간 인공지능의 규제 및 사용과 관련한 18개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기업의 인공지능 피해 예방 책임과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 등을 포함하여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인공지능 프런티어 모델의 안전혁신법」의 법률안(2023-2024 상원법률안 제1047호)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주의회 상원으로 환부되었다. 이하 18개 법률의 내용을 주제별로 살펴본다.

인공지능의 법적 정의

1. 2024년 법률 제843호(하원법률안 제2885호): 인공지능에 대한 캘리포니아주법상 정의를 캘리포니아주 정부법전 제11546.4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통일하였다.
(1) “인공지능”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보이는 공학적 체계나 기계 기반 체계로서, 명시적이거나 암묵적 목적에 따라, 그것이 받은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물리·가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출력 정보를 어떻게 생성하여야 하는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2. 2024년 법률 제292호(상원법률안 제981호): 딥페이크 음란물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콘텐츠를 즉시 삭제하여야 하는 사회관계망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3. 2024년 법률 제289호(상원법률안 제926호):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647조를 개정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드는 행위를 형사상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다.
4. 2024년 법률 제926호(하원법률안 제1831호):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311조 등을 개정하여 인공지능을 사용한 아동 음란물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선거기간 중 가짜뉴스 대응

5. 2024년 법률 제260호(하원법률안 제2355호): 인공지능의 활용 정도와 관계없이, 선거 홍보물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그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6. 2024년 법률 제261호(하원법률안 제2655호): 선거일 전후의 일정 기간 중에 가짜 정보를 포함한 콘텐츠를 차단하고 표시하며, 그러한 콘텐츠 신고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7. 2024년 법률 제262호(하원법률안 제2839호): 선거 홍보물과 그밖에 선거 관련 표현에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를 악의로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정보 관리: 개인정보의 보호

8. 2024년 법률 제802호(하원법률안 제1008호):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에 인공지능으로 출력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였다.

정보 관리: 인공지능 활용 여부의 공개

9. 2024년 법률 제316호(하원법률안 제2905호): 텔레마케팅 전화에 인공지능 음성을 사용한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10. 2024년 법률 제928호(상원법률안 제896호): 주정부기관이 인터넷이나 유선상 민원 응대 과정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주정부에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의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의 작성을 주문하였다.

정보 관리: 기술 정보의 공개

11. 2024년 법률 제291호(상원법률안 제942호): 다음을 인공지능 개발자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 인공지능 탐지 도구의 생성 및 무료 제공
 - 개발자의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모든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시
 -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제3자가 개발자와 계약할 경우에도 개발자의 워터마크 기능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여야 하며, 위반 적발 시 72시간 내 계약 해지
12. 2024년 법률 제817호(하원법률안 제2013호): 2026년부터 인공지능의 학습에 사용된 자료의 정보를 개발자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정보 관리: 의료 분야

13. 2024년 법률 제848호(하원법률안 제3030호): 의료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환자와 소통할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14. 2024년 법률 제879호(상원법률안 제1120호): 진료 및 보험 청구와 관련한 결정에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하는 방안을 보험회사가 마련하도록 하였다.

디지털 초상권

15. 2024년 법률 제258호(하원법률안 제1836호): 민법 제334.1조를 개정하여, 영리 목적으로 고인이 된 자의 생전 모습을 무단으로 디지털 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6. 2024년 법률 제259호(하원법률안 제2602호): 대중매체에서 배우의 디지털 복제물을 사용할 경우 배우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교육에의 활용

17. 2024년 법률 제893호(상원법률안 제1288호): 공립학교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실무반을 조직하는 한편 2025년까지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줄 것을 캘리포니아주 교육감에게 주문하였다.

18. 2024년 법률 제927호(하원법률안 제2876호): 캘리포니아주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문해력 향상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의 검토를 주정부에 주문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 관련 18개 법률 제정”, 공공누리 제1유형, 2024. 10. 16.